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GLP기관) 지정제도 도입”

- 노동부,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GLP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유해·위험성 실험실의 운영규정 및 유해·위험성시험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을 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GLP기관)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인자가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 지정제

도는 노말렉산, TCE(트리클로로에틸렌),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산업화학물질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애와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평가하는 우수 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도입되었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으로 산업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및 위험성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생산함으로써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LP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험항목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갖춘 후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해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육성을 적극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관리자 고용, 회사 이익창출에 기여

- 연구용역결과, 고용비용보다 편익이 1.43배 높아

근로자 건강관리, 작업장 환경관리 등을 위해 보건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보다는

이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1일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화학물질 취급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실태 및 부담정도” 연구 결과,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비용 대

비 편익이 1.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관리자가 전임일 때 비용 대비 편익이 2.31배로 나타나 겸임일 때보다 1.55배나 더 큰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연구는 보건관리자를 자체선임하고 있는 전국 제조업 중규모 사업장의 약 9%를 표본으로 실태조사 한 것이다.

조사대상 근로자의 93.3%, 사업주의 100.0%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근로자의 81.3%, 사업주의 88.8%가 보건관리자의 활동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관리자의 선임이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선임을 부담으로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보건관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산업재해율('04년 0.56, '05년 0.40, '06년 0.51)이 전체 중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율('04년 0.60, '05년 0.58, '06년 0.56)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건관리자의 활동이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관리자 제도는 사업장의 유해인자, 작

업방법 및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실시된 것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1~2인의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도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의 경우 100.0% 이상의 선임률을 보이는 반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은 98.4%의 선임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자체선임 보건관리자 비율도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은 70.7%, 1,000인 이상 사업장은 92.9%인 것에 비하여,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은 18.8%로 현저히 낮아 체계적인 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구팀은 그동안 경제적인 부담, 보건관리자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중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이견이 많았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건관리자 제도의 효과가 직접적인 수치로 제시되었다며, 최근 업무상 질병 요양자의 증가, 중고령 근로자의 건강관리 요구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병원 근로자가 건강 더 안 챙긴다

- 작업환경측정 실시율 42.0%, 특수검진 실시율 39.6%에 그쳐
- 노동부, 감염성질환 예방 등 의료기관종사자 건강보호대책 수립시행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이 강화되는 등 병원종사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국 5만3천 여개소에 근로자 52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07.10, 222명), 병원체로 인한 감염성질환('07.10, 54명), 뇌심혈관질환('07.10, 34명)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고 있으나, 의료기관들은 보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보건관리가 양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작업환경측정 실시율 42.0%, 특수검진 실시율 39.6% 등 근로자의 보건관리실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종사자 보건관리 강화방안'에 따

르면, 보건관리자의 직무 이행실태를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 300인 이상은 보건관리자 전담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소규모 병·의원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동시에 협력업체 책임관리 강화 등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병원종사자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 및 보건관리자용 업무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주사침손상 예방을 위한 지침" 등 업무별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병원 경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09년부터는 "주사침손상 감시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